

ISSN 2288-3789

제11호

젠더와 입법 Brief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2018.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Brief 젠더와 입법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2018.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Brief

젠더와 입법

발 행 인 권 인 속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3156.7000 FAX 02.3156.7007
www.kwdi.re.kr

인 쇄 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代)

* 젠더와 입법 Brief는 비매품이며, 판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C O N T E N T S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5
-----------------	---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미투 입법	18
전자장치 부착 강화	39
성매매 채팅앱 규제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4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47
교육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51
군사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58
가족 지원 강화	61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시정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법제화	82
성 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	91
여성 건강 및 모성권 보장	95

I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젠더와 입법 포럼”은 매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이슈, 정책,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포럼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 연구기관, 정부부처, NGO 등 입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성인지적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로서 2013년부터 마련해오고 있다.

제1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 일시 : 2013년 3월 22일

▣ 주최 :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2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 일시 : 2013년 6월 4일

▣ 주최 :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김춘진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3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 한일국제컨퍼런스

▣ 일시 : 2013년 9월 14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4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 일시 : 2013년 11월 19일

▣ 주최 : 이자스민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5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와 입법·정책의 과제

▣ 일시 : 2013년 12월 4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6차 (2013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방안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 주최 : 김현숙 국회의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7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젠더와 사회보험
- ▣ 일시 : 2014년 4월 26일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8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통일 ·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젠더법 정책
- ▣ 일시 : 2014년 6월 26일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제9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 ▣ 일시 : 2014년 7월 5일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0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국제컨퍼런스
- ▣ 일시 : 2014년 7월 10일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1차 (2014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 ▣ 일시 : 2014년 12월 20일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젠더법학회

제12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 ▣ 주제 :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 ▣ 일시 : 2015년 4월 29일
- ▣ 주최 :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3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모색

▣ 일시 : 2015년 7월 24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4차 (2015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사회보장과 젠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제15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일시 : 2016년 7월 7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제16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한·독·일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실태 및 법과 제도 국제컨퍼런스

▣ 일시 : 2016년 9월 22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임이자·정춘숙·김삼화

제17차 (2016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제18차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 일시 : 2017년 6월 1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제19차 (2017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 국제컨퍼런스:
스위스, 벨기에,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 일시 : 2017년 11월 9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한정애 · 임이자 · 김삼화 · 이정미

제20차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미투 입법 과제

▣ 일시 : 2018년 5월 16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 · 윤종필 · 신용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제21차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의 있습니다”

▣ 일시 : 2018년 7월 3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의원 남인순 · 정춘숙 ·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제22차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포섭

▣ 일시 : 2018년 9월 20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 · 남인순 · 정춘숙

제23차 (2018년)

젠더와 입법 포럼

▣ 주제 :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

▣ 일시 : 2018년 12월 4일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 · 여성인권정책포럼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미투 입법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5월 16일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정춘숙·윤종필·신용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다. 이 포럼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어 있는 미투 법안들을 검토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가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 미투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018년 1월 29일 한 여성 검사의 성희롱 피해 고발로 촉발된 #MeToo 운동 이후, 3개월 간 (2018.1.30.~2018.4.30.) 발의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관련 법안 총 95건을 분석하여, 발의안의 현황과 쟁점을 분류·검토하였다. 그 결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적용범위와 형량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강간죄 등의 죄형의설 폐기, 성적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처벌(성희롱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특례 마련,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충분한 보호 마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구체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펜스를 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 관련법 체계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신설에 대한 반대 논거 및 이에 대한 비판의견, 신설 관련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개의 비동의 간음죄 관련 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있어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의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 보완, 비동의 간음죄 규정 및 입증의 방식 검토,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 및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우옥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한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충 내용 및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다.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7월 3일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의원 남인순·정춘숙·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이 포럼은 2018년 5월 10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톱킹범죄 처벌법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 관련 문제점과 법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먼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스톱킹 처벌법 입법방향”을 발표하였다. 현장에서 마주한 상담경험과 상담통계를 바탕으로 스톱킹 범죄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해 담겨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톱킹 처벌법에는 스톱킹범죄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아닌 촘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점 및 입법방향”을 발표하였다. 현행법상 스톱킹 규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스톱킹처벌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톱킹 처벌법 제정 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나 개인정보 보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름하는 구성요건 정도로만 두고,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장웅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임종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두 발표문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입법 사항에 대해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2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포섭]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9월 20일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남인순·정춘숙,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다. 이 포럼은 현재 교육, 문화예술 영역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구성된 관련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 분야에 존재하는 성희롱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안의 의의와 법안의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보완과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가 “교육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에서의 성희롱 폭로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초기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잘 풀어나간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는 특히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인 교장의 입장과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의 영향이 컸고, 같은 매 뉴얼이어도 이행하는 사람의 경험, 관점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따라서 법적으로



는 성희롱 정의의 문제부터, 성적 동의 연령 상향,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조사 주체와 전문성 확보, 징계시효 또는 민사상 배상 청구 확대, 사립학교에 대한 강제력 마련 방안, 실태조사, 학부모 민원 및 학부모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 신고의무제도 마련, 그루밍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위원)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여, 문화예술계 성희롱 사각지대의 관점에서 두 안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리랜서 지위의 높은 비율, 가해자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의존적 관계, 예술 영역에서의 비대등한 계약 등의 특성상 현행법 체계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어 조숙현 변호사(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가 “성희롱 2차 피해 양상 및 규율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상당된 사건들, 법무부 대책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성희롱 2차 피해 양상을 정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규율 방안을 외부적 규율 방안(사업주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내부적 규율 방안(조직 내부의 행동 수칙 및 징계 규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희롱·성차별 금지법 제정안의 의의와 성희롱 규제 관련 쟁점”을 발표하였다. 우선, 성희롱·성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경제·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를 요약한 뒤,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희롱 정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세 쟁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신상숙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이한본 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위원),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네 가지 발표문에 대한 찬반의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입법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12월 4일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교토여자대학교의 MOU 체결 2주년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미투운동의 실태와 특징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테지마 아키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MeToo와 형법 개정”을 발표하였다. 2017년에는 무려 110년만에 일본 「형법」이 개정되어 성범죄규정 역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이 이루어지기 까지 약 30년에 걸친 페미니스트, 당사자, 지원자들의 운동과 연구 활동을 설명하고, 「형법」 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후 일어나고는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일본의 #MeToo 운동을 개관하였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유독 실명에 의한 #MeToo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미나미노 카요 교토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MeToo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MeToo 운동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에



서의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관용”,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준엄하거나 엄격한 “피해자상”을 적용하려는 관습을 지적하고, 단순히 관습뿐만 아니라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 고용 상 신분 차이, 여성 내 분단 상황 등 고용 환경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상”, 즉 “당사자 적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였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스쿨 #MeToo 실태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조건” 발표를 통해 한국의 미투 중에서도 스쿨미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설명하였다. 특히, 성 평등한 학교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로서 새로운 성교육 가이드 마련을 비롯하여, 시안처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학교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정례화,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및 그루밍 방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토대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투 운동 및 성범죄 관련 법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상이한 사회적·제도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양국이 서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여 여성폭력금지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II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이하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 동향을 정리한다.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직장 내 성희롱, 권력형 성폭력,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유포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다수의 입법을 통해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18년 초부터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Too) 운동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촉발된 것으로서, 한 해 동안 매우 많은 미투 관련 발의안이 제안되었고, 그 중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되고,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

그 외에는 가족 영역에서 미혼모·부의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노동 영역에서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공개, 관리직 또는 임원 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를 확대한 성과가 있었다.

01 미투 입법

2018년 미투 운동은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교육기관 등을 불문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을 폭로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과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또한 가해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반면,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오랜 기간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음이 문제되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한 해 동안 여성폭력과 관련된 약 200여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012065)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제정안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법체계에서 구분하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외에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점에서 타당성을 검토 받아 의결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



에 더하여,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 여성
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제7조, 제8조),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및 지방여성폭력방지원회 설
치(제10조, 제11조), 여성폭력통계의 구
축(제13조),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지원

(제14조, 제15조), 피해자 정보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제17조, 제18조), 여성폭력예방
교육(제19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제21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제16086호, 2018.12.24., 제정, 2019.12.25.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개정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676)은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미투 운동을 통해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개선이 있었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의 징역형은 지금까지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었다.

형법

[법률 제15793호, 2018.10.16. 일부개정, 2018.10.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p> <p>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p> <p>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3594) 또한 같은 날인 2018년 9월 20일 수정가결되었다. 그동안 조직·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2년 이하의 징역형) 조직 내 성범죄 근절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끊임 없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792호, 2018.10.16. 일부개정, 2018.10.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p> <p>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p> <p>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874) 또한 2018년 11월 29일 원안가결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

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하였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개정 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안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663)도 같은 날인 2018년 9월 20일 원안가결되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기 쉽고 현행 법체계에서 구제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였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에 첫째,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셋째,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의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5821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1.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생략) 〈신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전

②·③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략)

개정 후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10. · 11. (생 략)</p> <p>② (생 략)</p>	<p>10.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p> <p>11. · 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8년 9월 20일에는 나아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성범죄 사유를 확대하고, 공직내 성희롱 · 성폭력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015649)도 원안가결되었다. 미투 운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 성폭력 실태도 여지없이 폭로된 바, 공직자의 성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고, 조직적인 은폐 · 축소 또한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강하게 제재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

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 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857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4.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신설〉</u></p>	<p>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7. · 8. (생 략)</p> <p>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2. (생 략)</p> <p>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생 략) <신 설></p> <p>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담당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7. · 8. (현행과 같음)</p> <p>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 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 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p>



개정 전	개정 후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처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 (생 략)</p> <p>④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p> <p>⑤·⑥ (생 략)</p> <p>⑦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p>	<p>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p> <p>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처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p>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⑧ 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p>



지방공무원법 개정



마찬가지로 2018년 9월 20일에는 지방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발의, 의안번호 2015675)도 원안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

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5801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4.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1. ~ 6의2. (생략)</p> <p>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개정 전	개정 후
<p><u>〈신 설〉</u></p> <p>7. 8. (생 략)</p> <p>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2. (생 략)</p> <p>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⑦ (생 략)</p>	<p>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7. 8. (현행과 같음)</p> <p>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 제2~7항과 같음)</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729)은 2018년 12월 27일 원안가결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보다 강하게 처벌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처벌을 보다 확실히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5호, 2019.1.15. 일부개정, 2019.7.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p> <p>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② (생략)</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u>제8조</u>, 제9조의 죄</p> <p>④ (생략)</p> <p>제59조(포상금)</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u>제7조제5항</u>, <u>제8조</u>, 제9조의 죄</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9조(포상금)</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u>제8조의2</u>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한편, 오늘날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더불어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도 여러 건 이루어졌다.

우선,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003)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

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p> <p>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p> <p>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p> <p>① (생 략)</p>	<p>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개정 후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1. ~ 4. (생 략)</p> <p><신 설></p> <p>④ (생 략)</p> <p>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생 략) <신 설></p> <p>②~③ (생 략)</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u>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u>에도 또한 같다.</p> <p>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u> 또한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02

전자장치 부착 강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분리되었으나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672)이 2018년 2월 28일 수정가결됨에 따라, 첫째,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가 추가되고, 둘째,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도 미귀국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924)이 2018년 8월 30일 수정가결되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에서 동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년 6월 30일에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94호, 2018.3.20, 일부개정, 2018.3.2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p> <p>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② (생략)</p> <p>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p> <p>① (생략)</p> <p>②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p> <p>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 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p> <p>2.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기간,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입국하지 아니한 기간</p> <p>3.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 기간</p>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

생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확정일에서 ‘고지일’로 개정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59호, 2018.9.18. 일부개정, 2018.9.18.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p> <p>① ~ ③ (생략)</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u>확정일</u>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u>다만,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u></p>	<p>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u>고지일</u>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u>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u></p>



03

성매매 채팅앱 규제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이족위원장이 대안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12001)은 2018년 2월 20일 원안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

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0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생략)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③ (생 략)</p> <p>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① (생 략)</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③·④ (생 략)</p> <p>제17조(상담소의 설치)</p> <p>① (생 략)</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17조(상담소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③·④ (생 략)</p> <p>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p> <p>① (생 략)</p> <p>〈신 설〉</p> <p>②~③ (생 략)</p> <p>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또한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568)도 2018년 3월 30일 수정가결되었다. 기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

다.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90호, 2018.4.17. 일부개정, 2018.4.1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5조(성매매 예방교육)</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④ ~ ⑨ (생략)</p>	<p>제5조(성매매 예방교육)</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0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2008730) 2018년 2월 20일 수정가결되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8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① · ② (생략)</p> <p>③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 · 운영 등)</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 · 운영 등)</p>



개정 전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생략)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개정 후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p> <p>①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 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0조(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p> <p>①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 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또한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발의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255)는 2018년 2월 28일 원안가결되어,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이혼소송, 자립·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3호, 2018.3.27. 일부개정, 2018.3.27.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p> <p>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본문에 따른 교육에 관한</p>



개정 전	개정 후
<p>④ ~ ⑨ (생략)</p> <p>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p> <p>① (생략)</p> <p>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u> 연장할 수 있다.</p>	<p>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u> 연장할 수 있다.</p>



05

교육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002)이 2018년 2월 20일 원안가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이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2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개정 전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9. (생략)

〈신설〉

〈신설〉

②~⑦ (생략)

개정 후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②~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u>단체</u></p> <p>〈신 설〉</p> <p>2.~6. (생 략)</p>	<p>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u>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u></p> <p>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u>공공시설</u></p> <p>3.~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아동복지법 개정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595)은 2018년 11월 23일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로 한정)을 추가하였다. 나아



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 관련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

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 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였다.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2019.6.1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치 등 조치) (생 략)</p> <p>〈신 설〉</p>	<p>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치 등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p>	<p>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p> <p>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p>



개정 전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2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2. (현행과 같음)

23.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화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략)

②·③ (생략)

개정 후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제23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06

군사기관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군인사법 개정



국방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758)이 2018년 12월 27일 원안가결되었다.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결격사유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군인에서 제적되도록 하였다.

한편,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조부모 및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다.

군인사법

[법률 제16224호, 2019.1.15. 일부개정, 2019.1.15. 시행]

개정 전

제10조(결격사유 등)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후

제10조(결격사유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전	개정 후
<p>1.~ 6의2. (생 략)</p> <p>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신 설〉</p> <p>7.· 8. (생 략)</p> <p>③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40조(제적)</p> <p>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p> <p>1. ~ 3. (생 략)</p> <p>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 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1.~ 6의2. (현행과 같음)</p> <p>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7.· 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p> <p>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p> <p>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p> <p>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p> <p>제40조(제적)</p> <p>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 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가. (생 략)</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p> <p>다. (생 략)</p> <p>5. 6.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48조(휴직)</p> <p>①·② (생 략)</p> <p>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단서 신설〉</u></p> <p>④ ~ ⑧ (생 략)</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다. (현행과 같음)</p> <p>5.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8조(휴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u>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u>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u>조부모 또는 손자녀의</u>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u>한정한다.</u></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07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취약부모 지원과 양육비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먼저,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879)이 2018년 11월 29일 원안가결되었다.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

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 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의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17조의6(아동·청소년 보호·교육) (생 략)</p>	<p>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 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호·교육) (현행 제17조의6과 같음)</p>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209)은 2018년 2월 28일 원안가결되었다. 기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한편,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6호, 2018.3.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p> <p>① 부 또는 모는 <u>혼인상태</u>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p> <p>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u>6개월</u>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u>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u></p> <p>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p>	<p>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p> <p>① 부 또는 모는 <u>혼인상태</u>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u>9개월</u>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u>〈단서 삭제〉</u></p> <p>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u></p>



개정 전	개정 후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p>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p> <p>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p> <p>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통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신설〉	<p>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p> <p>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신설〉	<p>제14조의4(비용환수)</p> <p>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개정 전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각 호 신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후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삭제>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③ (생 략)</p> <p>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여성 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하는 등 양육비 채무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 하여야 한다.</p>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7107) 또한 2018년 12월 7 일 원안가결되어, 양육비 이행이 보다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 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양 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 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 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 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 구하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5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6.25.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p> <p>① (생 략)</p> <p>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8. (생 략)</p> <p>③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u></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p> <p>① <u>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 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u>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u></p>	<p>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p> <p>① <u>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u></p>



개정 전	개정 후
<p>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4조(업무의 위탁)</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3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p> <p>2.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24조(업무의 위탁)</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아동수당법 제정 및 개정



한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아동수당법안(의안번호 2012257)이 2018년

2월 28일 원안가결되어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동수당법

[법률 제15539호, 2018.3.27., 제정, 2018.9.1.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지급권자"란 아동수당 지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질문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임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선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다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보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고)

-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 ①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5539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아동수당법」은 정춘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5350)이 2018년 12월 27일 수정가결됨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되었다. 제정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

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아동수당법

[법률 제16249호, 2019.1.15. 일부개정, 2019.4.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p> <p>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p> <p>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 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p> <p>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p> <p>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p> <p>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후단 삭제></p> <p><삭 제></p> <p><삭 제></p>



개정 전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 ① (생략)
- ② 보호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질문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 후

〈삭제〉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 ① (현행과 같음)

〈삭제〉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질문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개정 전	개정 후
<p>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p> <p>2. ~ 8. (생략)</p> <p>③ ~ ⑦ (생략)</p>	<p>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삭제〉</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08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시정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법제화

여성노동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 조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주로 공공부문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리직 또는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단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18년 2월 20일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004)이 2018년 2월 20일 원안가결되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고,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과 동시에 여성의 날 기념일이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

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420호, 2018.3.2. 일부개정, 2018.3.2.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0조(적극적 조치) ① · ② (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⑤ (생략)</p>	<p>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종 · 직급 · 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p>⑤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생략) <u>〈신설〉</u> ③~⑤ (생략)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기획재정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1117)은 2018년 12월 7일 원안가결되어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확대되

었다. 즉,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게 하였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2019.7.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개정 전	개정 후
<p>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u></p> <p>4. ~ 15. (생략)</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u></p> <p>4. ~ 1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p> <p>① <u>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u></p> <p>② <u>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u>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제2항에 따른 연차별 목표의 수립·이행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송옥주위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06837)은 2018년 12월 27일 수정가결되어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되었다. 즉,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1호, 2019.1.15. 일부개정, 2019.7.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u>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u>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u>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u>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u>과 <u>시행계획</u>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u>남녀 근로자 현황</u>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u>직종별·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u>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u>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u>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u>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u>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u>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622)은 2018년 5월 28일 수정가결되었다. 기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일정 구매비율을 정하여 포함하여야 하나,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88호, 2018.6.12. 일부개정, 2018.12.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근로기준법 개정



한편, 환경노동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767)이 2018년 12월 2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제6장의2 신설)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2019.1.15. 일부개정, 2019.7.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u>〈신 설〉</u></p> <p>〈신 설〉</p> <p>〈신 설〉</p>	<p><u>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u></p> <p>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p>



개정 전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11. · 12. (생 략)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109조(벌칙)</p> <p>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생 략)</p>	<p>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업무)</p> <p>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09조(벌칙)</p> <p>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09

성 주류화 정책 실효성 강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882)이 2018년 11월 29일 원안가결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

으로 받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실기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985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8조(성인지 교육)</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u>소속 공무원</u>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p> <p>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을 하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u>여성가족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u>한다</u>.</p> <p>④ ~ ⑥ (생략)</p>	<p>제18조(성인지 교육)</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u>전체 소속 공무원</u>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p> <p>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u>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여성가족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u>한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개정 후

-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p>⑦ <u>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⑧ 이 법에 <u>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p>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075)이 2018년 2월 28일 수정가결되어, 법제명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2018.9.28.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5조(분석평가 대상)</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후단 신설></p> <p>② (생략)</p>	<p>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u>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10

여성 건강 및 모성권 보장

모자보건법 개정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032)이 2018년 2월 20일 원안가결되어 고위험 임신부 및 난임 부부 지원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위험 임신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셋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였다. 넷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섯째,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

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모자보건법(의안번호 2017759) 또한 2018년 12월 27일 원안가결되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신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모자보건법

[법률 제15444호, 2018.3.13. 일부개정, 2018.9.14.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u>중앙모자의료센터</u>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 임신부 및 산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신부 및 산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신부 및 산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신부 및 산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p> <p>①~④ (생략)</p>	<p>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p> <p>① ~④ (현행과 같음)</p>



개정 전	개정 후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⑥ (생 략)</p> <p>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p>1. (생 략)</p> <p>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p> <p>3. ~ 7. (생 략)</p> <p>〈신 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p> <p>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 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p> <p>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p> <p>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p> <p>3.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신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 조리업자</p> <p>3. ~ 6.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모자보건법

[법률 제16245호, 2019.1.15. 일부개정, 2020.1.16.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u>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u> <p>〈신 설〉 〈신 설〉 〈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생 략)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u>사실</u>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p>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u>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u>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신 설〉 〈신 설〉 〈신 설〉</p>	<p>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u>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신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 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u>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u>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u>사실</u> 및 <u>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u>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p>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전	개정 후
<p>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 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p> <p>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u></p> <p>〈신 설〉</p>	<p>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u>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u>의심되는 사람의 범위</u>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p> <p>① <u>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산후 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u></p> <p>④ <u>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u></p>



개정 전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5. 6. (생략)

〈신설〉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⑤ (생략)

〈신설〉

개정 후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전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③ (생략)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3. 4. (생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후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전	개정 후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p> <p>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u>사실</u>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p> <p>〈신 설〉</p> <p>3. (생 략)</p> <p>〈신 설〉</p> <p>4. 5.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신 설〉</p> <p>3. ~ 6. (생 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2. (생 략)</p>	<p>제27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p> <p>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u>사실 및 조치내역</u>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p> <p>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p> <p>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2. (현행과 같음)</p>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6898)은 2018년

11월 29일 원안가결되어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개정하
였다.

학교보건법

[법률 제15965호, 2018.12.18. 일부개정, 2019.6.19.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u>기구(器具)</u>를 갖추어야 한다.</p> <p>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u>기구(器具)</u> 및 <u>용품</u>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u>기구</u> 및 <u>용품</u> 구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 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131)은 2018년 12월 7일 원안가결되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

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제16077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6.25.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할 수 있다.</p> <p>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1. ~ 3. (생략)</p> <p>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u>모성 보호</u>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p> <p>5. 여성농어업인의 <u>모성 보호</u>,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p> <p>6. (생략)</p> <p>〈<u>신설</u>〉</p> <p>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u>모성 보호</u>,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u>모성권 보장</u>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p> <p>5. 여성농어업인의 <u>모성권 보장</u>,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p> <p>6.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u>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u>모성권 보장</u>,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 02. 3156. 7000 F 02. 3156. 7007